

“도심 재건축 · 재개발 주택공급 확대의 수단”

김윤덕 국토부장관 “정부 차원 전방위 지원 나설 것”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현장을 찾은 가운데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정부 차원의 전방위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성수동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재건축·재개발이 도심 주택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자세로 제도·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순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윤명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성수1 재건축은 노후 저층주택과 단



독주택이 혼재한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04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롯데건설) 선정, 2024년 도시정비법 특례 적용으로 본격화됐다. 총 322가구(분양 272가구, 임대 50가구) 규모로 지상 35층 공동주택 3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 고심이 컸을 것”이라며 “성수1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시공자가 함께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9·7 대책이 반영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태락 부동산원장은 “공사비 계약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사전검증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공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초기 사업비부터 공적보증까지 전 단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또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부와 협력해 서울 주택공급의 중추인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안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박정규 도의원, 축사시설 화재예방·안전관리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곡 초소 사례로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시설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매년 축사시설의 화재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관리계획에는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축산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 화재·재난·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곳에 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진단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축사 신축 시 축사동사이 5미터 이상 간격 확보, 불연성 보온재 사용 및 가연성 보온재 단계적 교체, 소화용구의 설치와 정기점검 등을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김성수 도의원 발의 ‘도의원 소송비 지원 개정 조례안’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해당 조례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개성공단 재개 · 남북경협 활성화 모색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대 개성공단 기업협회장들과 간담회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27일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역대 개성공단 기업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문창섭 삼태통상(주) 회장(제2대 회장) △배해동 (주)대성그룹·도나모리 회장(제4대 회장) △이재철 (주)제씨푸드 대표(제9대 회장) 등 역대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 장관이 강조한 ‘평화적 공존과 경제협력의 단계적 복원’ 구상과 연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개성공단 재개동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올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남북대화도 이어져 개성공단 재개동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 회복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일부와 함께 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7.2%가 개성공단의 경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0곳 중 8곳이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6년새 임금체불액 20% ↑, 법률구조 신청은 반토막

법률구조공단 인력난 등 주요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은,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 사업 지원 건수는 2020년 9만174건에서 2024년 5만4,913건으로 39.1% 감소했다.

올해 지원 실적도 8월 기준 4만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소송비용을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 실적을 보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본안 소송’ 지원 건수가 2020년 5만9,181건에서 2024년 2만6,362건으로 55.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전소송’은 3,615건에서 2,440건으로, ‘소송 전 구조’는 154건에서 3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임금체불 규모는 건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2020년 1조5,830억원이던 체불액은 2023년 1조7,845억원,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7월까지 1조3,421억원이 체불돼 연간 기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사업 실적이 줄어든 주된 이유로는



법률구조공단의 만성적 인력난이 꼽힌다.

공단 재직 변호사는 2020년 175명(공익법무관 포함)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줄었다.

정규 변호사 정원은 같은 기간 114명에서 144명으로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15명(파견 1명 포함)에서 118명이 돼 사실상 정체됐다.

고용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소화도 소송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선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 민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이 제도는 가장 3개월치 임금까지만 지급되며 나머지 체불액은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맡아온 법률구조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민사소송 지원을 강화할 별도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임금체불 소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호 기자 · 진안=우태만 기자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 · 책임 전복서 실천”

혁신당 도당, 군중안전 · 2차가해 방지 · 심리지원 등 3대 실천과제 제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29일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기억과 책임을 전복에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서울 전역에서 10시 29분 사이엔 추모가 울리는 오늘, 진실 규명과 책임, 재발 방지라는 사회의 책무를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이 “국가의 실패를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이태원 특별법 개정과 2차 가해 방지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북도당은 “이에 전

적으로 동의하며 입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올해는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도 한국을 찾아 진실과 책임, 안전기준 강화를 촉구했다”며 “참사는 국적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추모를 넘어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 대책을 전복에서 먼저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군중밀집 안전점검 상시화를 통해 전북 14개 시·군의 축제·행사 등에 ‘사전 위험도 평가·현장 관제·사후 평가’ 3단계 점검체계를 의무화한다.

둘째, 현장 지휘·연락 체계 표준화를 추진해 경찰·소방·지자체의 합동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현장총괄 지휘관’ 지정과 인파 분산 가이드라인을 정례훈련에 반영한다.

셋째, 2차 가해 차단 및 심리지원 강화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혐오·외국 확산을 막고, 전북형 장기 심리지원 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도상 위원장은 “우리는 기억을 행동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중앙당의 약속과 함께, 전복에서 먼저 변화의 기준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나와는 무관”

나인권 도의원, 배후 조종 공모 의혹에 “결백” 주장
“돈 거래 의혹 간판업체 사장에게 오히려 고소당해 무고죄로 책임 물을 것”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김제)이 J모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자신이 배후에서 사건을 기획하거나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29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자신 역시 돈거래 의혹이 있는 간판 업체 사장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밝혔다.

나인권 의원은 최근 김제 지역사회에서 마치 자신이 이 일에 깊게 관여된 것처럼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세 사람이 반박해서 말하면 거짓말도 사실이 된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의 헛소문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나 의원 측은 향해 은밀하거나 드러내놓고 전파되는 마타도어의 주요 내용은 ‘제보자 K 씨를 배후 조정하고 있다’거나 ‘모 방송사 기사를 사주해 언론 보도를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저는 제보자 배후의 배후를 조종한 사실도 없고 언론 보도를 사주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며, 사건의 본질이 자신이 기획하고 배후에서 조장을 한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흑색 선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인지 오히려 자신이 사건과 “관계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소를 당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평가했다.

나 의원은 언론 보도와 같이 돈 거래 의혹이 있는 간판 업체 사장 당사자가 본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확인했다.

나 의원은 고소인(간판 업체 사장)

이 보낸 고소장을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그제(27일) 받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고소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본인과 관계없는 이야기이니 본인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고, 그 외 제보자나 업체 대표와 깊은 소통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이 자신이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의 기획이나 공모”에서 비롯되었다는 원인론을 부인하고, 사건의 실제 원인은 관련자들 내부의 수십 년간 지속된 깊은 인간관계와 갈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뇌물을 주었다고 추정되는 업자(업체 대표)와 제보자는 이중 사촌 2남매, J모 시장과 제보자는 최소한 20년에서 30년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김제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출마 의지를 표명한 사람은 현 김제시장과 자신 두 사람뿐이기에 둘만 이 경쟁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J모 시장 측이나 지지자들이 자신을 “상대 후보”로 특정해 비난

하며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자신을 특정해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나 블로그 글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J모 시장이 이 사건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의혹”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혹 제기”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거짓으로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사 예정 통보 등은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고한 자를 무고한 책임은 따로 묻겠다”며, 현재 법률 검토를 통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사법 당국이 철저히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하루속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며, “그 길만이 지역사회 혼돈을 조기에 매듭짓고 김제 공동체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공백없는 필수의료, 따뜻한 공공의료, 함께 하는 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JEONBUK STATE NAMWON MEDICAL CENTER

< 원장 : 오진규 >